

보도자료

아시아 철강의 녹색 전환에 해법은?

기후솔루션·CC 공동 개최...한국·일본·인도 3국 관계자, 녹색 철강 전환의 키포인트 논의해
“공공 부문, 녹색 철강 수요 충족해줘야”...“정부의 확실한 정책적 시그널 필요해”

철강산업은 산업 부문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으로, 철강 산업의 탈탄소가 주요 산업 국가들의 탄소중립 달성의 열쇠가 됐다. 철강 강국이 많은 아시아에서도 녹색 철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철강산업을 주도하는 한국, 일본, 인도의 철강 관계자들이 철강산업의 탈탄소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22일 기후솔루션과 클라이밋 카탈리스트(Climat Catalyst)는 공동으로 '아시아 철강 산업의 탈탄소를 위한 3자 협력대화'를 개최해 각국의 산업, 투자자, 정책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시아 철강 산업의 탈탄소 방향과 이를 가속할 정책과 전략을 논했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달 21일부터 삼일 동안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되는 제13회 청정에너지장관회의(The 13th Clean Energy Ministerial)의 '산업 탈탄소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Industrial Deep Decarbonization Initiative, 이하 IDDI)'에서 다룰 탈탄소 전략과 방향에 대해 앞서 논의하는 자리였다.

오전 세션에서는 3국의 공공 조달 부문이 철강 산업의 녹색 전환에 어떻게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각각의 발제를 통해 녹색공공조달 영역에서의 △녹색 철강 또는 저탄소 철강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의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 △공공조달 내 조달 대상으로 녹색 철강 포함 △공공 영역을 시작으로 민간 영역으로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의견이 수렴됐다.

사단법인 넥스트의 고은 이사는 지난 8일 발간된 정책브리프 ['저탄소 철강 시장 창출을 위한 한국의 녹색공공조달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을 바탕으로 한국의 현행 공공조달제도가 어떻게 녹색 제철의 시장 진입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서 어떠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설명했다.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김은지 박사는 일본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성장전략과 철강 부문에서의 과제와 대응법을 짚었다. 한국의 철강산업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일본 철강산업 역시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인프라 정비를 위한 막대한 자금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자금 조달과 함께 안정적 수요 확보도 일본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에너지 자원 연구소(The Energy and Resources Institute, 이하 TERI)의 기리시 세디 선임이사는 인도의 저탄소 철강 전환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인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수요 대응을 위한 성장, 디지털화, 탈탄소라는 세 가지 큰 트렌드를 따라 수소 직접환원철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해나갈 전망이다. 인도 역시 207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절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녹색 철강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 및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도는 이를 해결하려 공공조달 내 녹색제품 조달을 활성화할 제도도입을 논의 중이다.

2022년 8월 23일 배포 (즉시 보도 가능)

오후에는 한국의 공공녹색조달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미국의 청정구매법(Buy Clean Act)과 녹색 철강을 분류하는 기준 및 인증 제도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미국 청정구매법에 대해서는 정책 연구기관인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마이크 윌리엄스 선임연구원이 발표했다. 청정구매의 핵심 내용은 공공 부문 프로젝트에 제품 조달 시 철강을 포함한 일부 품목에서 가격은 물론 탄소 배출량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캘리포니아, 워싱턴, 콜로라도주 등 주 정부에서 시작했다. 공공사업에 조달을 희망하는 철강사는 탄소배출 공개를 비롯한 투명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움직임은 주 정부를 넘어 연방정부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녹색 철강의 정의 및 인증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철강산업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리스폰시블스틸(ResponsibleSteel, 이하 RS)의 CEO 애니 히턴이 발제를 맡았다. 히턴은 RS에서 개발한 인증 제도를 소개했다. RS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비롯해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한 포괄적인 기준에 따라 철강 제품 및 현장 인증을 진행한다. 이러한 인증을 위한 데이터를 토대로 수요자들로부터 수요 시그널을 형성하는 데 활용하고, 철강 관련 각종 글로벌 이니셔티브 간 연대도 도모하고자 하며, 철강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이면서도 세부적인 관련 검증 사항을 추가적으로 개발해나갈 예정이라고 RS는 전했다.

이러한 다양한 주제의 발제를 바탕으로 산업 관계자 및 투자자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TERI의 기리시 이사와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의 노변담화에서는 공공조달 영역의 강화와 함께 전력 부문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됐다. 또 이를 위한 정부로부터의 R&D 지원과 탈탄소화를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논의됐다.

철강사 및 수요 기업 패널 토론에서는 주요 철강사들의 녹색 철강으로의 전환 현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인도의 철강사 JSW 그룹의 지속가능성 총괄을 맡고 있는 프라보다 아차라는 지속가능성 관련 17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전체 공급망에 적용하는 계획을 소개했다. 포스코경영연구소 진윤정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포스코가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이 정부의 강력한 탄소중립 이행 요구와 투자자 및 고객사의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구체화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진 수석연구원은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원료 단위의 감축에 대한 이행계획을 구축 중이며 이와 관련해 주요 원료 공급사와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재생에너지 조달 및 에너지 효율성 개선의 중요성, 합리적 가격대 형성의 필요성, 글로벌 철강 관련 공통된 정의 및 기준 개발의 필요성, 단계적 전환을 통한 자금조달 영향 최소화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녹색 철강에 민간 영역의 조달에 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투자자 패널들의 토론도 열렸다. 저탄소 철강 개발을 위한 투자자들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저탄소를 분류할 기준 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도 거론됐다. 이와 관련해 S&P글로벌의 ESG 솔루션 헤드를 맡고 있는 이영진 이사는 투자 유인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저탄소 수소에도 분명한 규제와 정책들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주는 확실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 커뮤니케이션 담당 김원상, wonsang.kim@fourclimate.org, 010-2944-2943

보도자료는 홈페이지(<http://www.fourclimate.org>) 뉴스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